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73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박형수 · 강승규 · 조배숙
이성권 · 배준영 · 강대식
주호영 · 권영진 · 나경원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안 제27조제1항, 제3항, 제5항)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거부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안 제28조제2항, 제5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마. 이행강제력 제고(안 제21조, 제34조, 제35조)

-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등록(변경신고·변경등록 포함),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심의·제한의 대상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이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를 “각 목 또는 제4조제6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

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제2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둔다”를 “두고,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외국인투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12.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외국투자가”를 “외국인, 외국투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2호 중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을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으

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을 “자는 5년”으로, “1천만원”을 “5억원”으로, “처한다”를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등록한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이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벌칙)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생략)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⑤ 제4항의 심의·제한의 대상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이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생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 ----- ----- -----

----- . -----

----- 각 목 또는 -----

제4조제6항의 -----

----- . -----

② -----

-----.다만, 경영상 지배권 취득, 주요 사업·기술 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신설>

⑥ (생략)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요건-----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둔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
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
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두고,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
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
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외국인투자위원
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로 정한다.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
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

-----.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

----- 외국인, 외
국투자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
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
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⑥ -----

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
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⑥·⑦ (생략)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
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 (생략)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

-----.

1. (현행과 같음)

2. ----- 해당하거
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5조(벌칙) ① -----
----- 자는 5년 ----

----- 5억원 -
-----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포함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한하기로 결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제>

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생략)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이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제36조(벌칙)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기업의

<u>제36조</u> · <u>제37조</u> (생략)	<u>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37조</u> · <u>제38조</u>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	--